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4/22℃ 목포 14/21℃ 여수 16/21℃

단기 4342년 (음력 9월 1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0호 1판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순천만에 날아든 겨울진객 흑두루미

29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천만을 찾은 겨울의 진객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70여 마리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이번에 도래한 흑두루미의 무리 속에 일본 이즈미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흑두루미 한 마리가 함께 발견돼 순천만 서식지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돔구장+인구 5만 신도시 건설

광주시-포스코건설 MOU 서구 그린벨트 유력…스포츠레저 복합도시로

오는 2013년 하반기에는 광주시민들이 돔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주)포스코건설과 29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주지역 그린벨트에 돔구장과 함께 인구 5만 이상 규모의 스포츠·레저·관광·주택 복합 신도시를 동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MOU 체결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야구장 신축 요구가 빗발쳤으며, 시장 재임 동안 이는 큰 부담이 됐다"며 "시의 재정부담 없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돔구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돔구장이 들어설 부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두 곳으로 압축됐다"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광주의 확장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망이 갖춰지고 청소년이나 노인을 비롯 여러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서구 일대의 그린벨트에 돔구장이 들어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시는 (주)포스코건설로부터 연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후 도시계획 검토 및 사업타당성 조사, 도시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 수용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2011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4천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주)포스코건설에 돔구장 부지를 제공하고,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개발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신도시 개발은 시가 직접 맡고, 포스코건설에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해 업체는 여기서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시는 행정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변 '땅투기' 등을 우려해 돔구장 부지는 연말쯤 신도시 개발계획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풍암지구나 상무지구 중간 크기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

박 시장은 "돔구장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이 있으나 이왕에 야구장을 신축한다면,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관광이나 레저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헌재 "미디어법 유효"

처리과정 위법성은 인정…민주 "정치적 판결" 반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있었으나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 시비가 종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29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신문법 표결 당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여부와 관련,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재판관 7명이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의 의 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 당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6대3으로 '침해'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헌재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서울대, 모든 郡에서 1명 이상 뽑는다

내년부터 할당제 확대

서울대가 현재 고교 2년생이 입학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또 소외계층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군(郡)지역에 대한 지역할당제도 시행한다.

서울대는 29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753명(전체 정원의 24.2%)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서울대가 2008년 입시의 정원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이를 정원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이 전형에 '군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모든 군에서 최소 1명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되 1, 2단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펠냉장고 21만대 리콜

삼성전자 폭발사고 결함 인정…가전사상 최대규모

삼성전자가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지펠 냉장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21만대 규모의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국내 백색 가전 부문에서는 최대 규모로, 지펠 냉장고는 백색 가전 전문 제조사인 삼성 광주전자에서 생산됐다. 〈관련 기사 8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 SRT·SRS·SRN 계열 일부 모델 21만대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냉장고 폭발 사고는 냉장고 냉매파이프의 서리를 제거하는 히터의 연결 단자에서 누전되면서 이에 따른 발열로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리콜 대상이 되는지는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1588-3366)로 연락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www.3366.co.kr)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